

주차 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전주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원도심 유료·무인 노상주차장 구축 등 주차 부족 문제 해소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공구거리, 전북대 대학로 등 전주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위치정보와 여유 주차공간 확인, 주차요금 결제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이 본격화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스템

구축과 SW개발 용역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달부터는 서비스 준비를 위한 전기·통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고사동 공구거리와 전북대 구정문 앞에 '유료·무인 노상주차장'을 구축해 해당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원도심 내 11개 주차장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제센터를 통해 영상을 통합 관리하고, 카카오톡과 티맵 등 네비게이션과 연계해 주차장 내 주차 가능한 여유 노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인근 6개 주차장에는 주변 상권과 연

계한 모바일 주차권 시스템이 구축돼 시민들이 모바일 주차권 발행 상기에 마련된 스마트 패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결제 시 주차 할인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그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요금 미납자 관리와 요금 징수 체계 미흡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미납자 통합관리 및 자동징수 시스템 구축 △모바일 고지 및 수납처리 기능 등도 구현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동시에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전북대학교 등 각 지역 상인회와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네트워크 운영

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직접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실증·체험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공구거리와 전북대 대학로, 원도심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공모 대응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트리허그, 나무야 안아줄게!'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30일 한옥마을을 태조로 가로수에서 수거한 나무 옷 86벌을 세탁했다. 겨우내 썩어 썩은 나무 옷을 제거한 나무 옷은 별 좋은 센터 내 잔디광장에서 살균·건조한 후 재보수 작업 등을 거쳐 옮겨올 다시 활용될 예정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전주시 완산구,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개정... 임차인 권리 확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까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국의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

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됐다.

열람신청은 시청 세정과, 양 구청 세무과 및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열람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도 지체없이 열람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드론산업, '강한 경제' 전주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전주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16억원 확보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K-드론 선도도시' 전주시가 올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강한 경제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먹거리산업 육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년 연속으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바이로봇과 드론프리, 비아 등 다수의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입주기관이 참여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에도 2건의 사업이 선정되는 등 전주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먼저 지난 2019년부터 지역 특색에 맞는 드론 서비스모델 발굴과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올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드론 배송과 재난 예방·대응 실증을 우선과제로 지정해 추진됐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40개 지자체 중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캠퍼스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비아, 디플레스, 우리아이오, ANH시스템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한옥마을~남고산 지점 간 드론 물류배송과 산불 예방 및 초기진화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일상 속 드론 배송 정착을 목표로 산간지대라는 악조건 속에서라도 안전한 드론 자율비행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드론 우수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에는 총 34개의 드론기업이 신청한 가

운데 전주시를 주무대로 활동중인 캠퍼스통합기술원과 바이로봇을 비롯한 총 17개 드론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캠퍼스통합기술원은 '드론축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주제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대회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드론축구 용품 개발 및 해외 마케팅 등 드론축구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대편 드론기체에 탄환을 발사하며 시합하는 '드론 서바이벌'을 통해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이로봇은 영화 속 장면을 구현한 듯한 박진감 넘치는 경기시스템 개발로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드론축구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현재 드론 실증도시 공모

사업의 배경이 될 한옥마을과 남고산이 국토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 특구) 지정 공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까다로운 드론 비행 사전승인 절차와 관련한 혜택(간소화 및 면제, 유예)을 받을 수 있어 드론 서비스모델 개발·실증 활성화는 물론 실증을 희망하는 드론기업의 유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문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에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은 물론, 전주지역 드론기업이 다수 참여해 100% 공모 선정률을 거둔 것은 K-드론 선도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실력 있는 드론기업과 함께 더욱 매진해 드론산업을 '강한 경제' 전주의 대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이록 기자

전주시 완산구,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완산구청 직원 50여 명은 지난 29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속 안전 지킴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환자 끝단계 확보를 위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요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문강사의 안전의식 이룬

강의를 통해 내용을 익히며, 실전에서 적용하기 위한 상황별 실습 시간 방식으로 진행됐다.

엄 청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산구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경찰서, AI 영상 활용 금융범죄 예방 홍보 나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가상인간(AI) 영상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30일 금융범죄 예방 홍보활동은 덕진 재향경우회 정기총회에서 경찰서장, 경무과장, 여청과장, 경위회 회원 50여 명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태형 서장의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우리는 치안정책 '국민체감 약속 1·2·3호'인 악성사기·마약범죄·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가상인간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방면으로 범죄예방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 4180만원 지급 결정

지난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 418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급된 포상금 3710만 원 대비 400여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신고나 제보 의식이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최대 포상금 지급가능액은 3억 원으로 신고·제보자별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중

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이번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940만원이다.

결정된 포상금은 검찰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해당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사건별로 지급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선관위는 "5일 앞으로 다가온 4.5. 재선거와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